

5·18 단체, 이제는 ‘국가단체’로 거듭나야

40년 간 민주화 투쟁 3단체, ‘공법단체’ 설립 앞두고 내부 갈등
‘공로자회’ 구성 싸고 고소·고발까지… 지역사회 우려의 목소리

5월 단체들이 민주사회 발전을 이끌 국가단체로 탈바꿈할 기회를 잡았음에도 내부 갈등과 대립에 빠져 지역민의 우려를 낳고 있다.

1980년 5월 이후 40년 동안 민주화 투쟁에 앞장서던 5월 3단체(5·18민주화운동 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올 초 공포됨에 따라 5·18정신 계승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공법단체를 결성해야 할 책무를 안게 됐다.

하지만 5·18 공법단체 설립을 앞두고 회원 간 이해 관계에 따른 대립이 격화되면서, 올해 41주년 5·18기념식에 5월 3단체가 공법단체 자격으로 참석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5월 단체의 40년 투쟁의 결과이자 5월의 전국화를 위한 지역민들의 숙원이었던 ‘5월 단체의 공법단체화’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역사회와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한 이유다.

지역 사회 일각에서는 5월 관련단체가 갈등·반목에서 벗어나 ‘5월의 사유화’, ‘5월의 권력화’라는 비판을 견디지 못하고 지역사회의 자원으로 거듭나도록 혁신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공법단체 관련 법안에 따라 사단법인이었던 기존 3단체는 새롭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라는 명칭의 공법단체로 거듭날 계기를 맞았다.

보훈처는 2월 5일 이내에 3단체로부터 설립 준비위원회(10~25인 이내) 명단을 제출받아 위원장과 임원을 승인하고, 4월5일 공법단체로 출범할 계획이다.

5월 단체의 공법단체화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들뿐만 아니라 지역민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다. 공법단체 등록이 이뤄지면 정부로부터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합법적인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5월 단체의 재정 개선은 물론 5·18정신 계승 사업이나 이익의 지역사회 환원도 가능하다.

하지만 5·18공법단체 설립을 둘러싸고 기존 3단체와 다른 ‘공법단체설립준비위원회’까지 새롭게

게 생기면서 공법단체 설립 과정에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구성을 둘러싸고 파열음이 극에 달하고 있다. 5월 단체 안에서 서로 반복하며 고소·고발이 이뤄지고 있다. 새롭게 만들어진 ‘5·18공로자회 설립추진위원회’가 공법단체인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설립준비위원회 구성에 대한 ‘집행업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려는 움직임마저 나오고 있다. 여기에 5월 단체 모 인사에 대한 자격 시비와 금품수수 등의 의혹도 제기가 되면서 고소·고발까지 벌어진 상황이다.

5·18유족회 가입 자격 문제도 공법단체가 넘어야 할 숙제이다. 새롭게 설립되는 공법단체에는 사망한 5·18유공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미성년 동생 등)만 가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유족회 회원 300여 명 중 30%를 차지하는 방계(형제, 자매) 회원들이 관련법상 공법단체 참여가 불가능하게 됐다. 5·18유족회는 보훈처를 상대로 방계회원들이 법적으로 유족 예우를 받지 못하더라도 유족회 활동은 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보훈처도 최대한 유족회와 조율을 하고 있지만 해결방안이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이 과정에서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로서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중 추천된 1명이 포함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어디나 사람이 많으면 갈등이 있기 마련이다. 5·18 단체가 공법단체로 나아가는 길은 새로운 형식과 내용을 만들어가는 과정 중 하나로 내부 갈등은 있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일련의 변화 과정에서 서로 치열하게 토론하고 협의해 내부에서 갈등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이홍재의 세상만사 ▶2면
양현종 ‘운명의 날’ 30일로 미뤘다 ▶18면



대한 추위 어디갔나 ... 광주 영상 8도 ‘포근’



24절기 중 ‘큰 추위’를 뜻하는 ‘대한’인 20일, 낮 최고기온이 영상 8도를 웃도는 등 추위가 풀린 가운데 광주 서구 광천동 광주천 산책로에서 시민들이 장미다리를 건너며 모처럼 따뜻한 날씨를 즐기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공수처 공식 출범 임박 ... 오늘 김진욱 처장 임명장·현판식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1호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르면 21일 공식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진욱 공수처 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법사위는 보고서에서 “후보자가 공수처장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 도덕성 및 청렴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존 수사기관의 부적절한 관행에서 벗어나 민주적 통제를 적절하게 행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례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또는 늦어도 21일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김 후보자의 임기는 21일부터 시작되며 공수처가 공식 출범하는 셈이 된다.

공수처 준비단 관계자는 “임명안이 재가되고 임기가 시작하면 공수처는 공식 출범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며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하고,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취임식과 현판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1996년 참여연대가 공수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청원한 지 25년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공수처 설치를 대선공약으로 내건 지 19년 만에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수사를

전담하는 조직이 현실화하는 것이다.

물론 공수처가 공식 출범한다고 해서 즉시 수사기관의 역할을 할 수는 없다. 공수처는 김 후보자의 임명 직후 사무처리를 위한 행정직원을 받는다. 1차로 행정부 부처에서 10여명이 전입될 전망이다. 이후 차장 1명, 공수처 검사 23명, 수사관 40명 등의 인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차장은 판·검사, 변호사 등 법조계 재직 15년 이상의 경력이 조건으로, 처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검사는 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야 한다. 위원회에는 여당 추천 2명과 야당 추천 2명이 참여하게 돼 있다.
/오광록 기자 kroh@

외교 정의용·문체 황희·중기 권칠승 내정

문 대통령, 3개 부처 개각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교체와 함께 후임에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내정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는 민주당 권칠승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관련기사 3면>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외교관료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3년 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서 외교안보 분야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교체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춰 외교관료를 재정부하하는 동시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추진 동력을 다시 살려보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강 장관의 교

체로 정부 출범부터 함께 한 ‘원년 멤버’ 장관들은 모두 교체됐다.

황희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양천갑을 지역구로 둔 재선 국회의원이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언론 담당 행정관으로 근무했으며, 민주당 홍보위원장, 원내부대표 등을 지냈다. 황 내정자는 목포 출생으로 초등학교 이전에 가족과 함께 서울로 상경해 성장했다.

권칠승 중기부장관 후보자는 경기도의회 의원을 거쳐 20·21대 총선에서 내리 당선된 재선 국회의원이다. 중기부 장관 교체는 박영선 현 장관이 오는 4월 서귀포시 보광선거 출마를 결심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



정의용 외교 황희 문체 권칠승 중기

장에 김형진 서울시 국제관계대사를 내정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이경희 전 한국전력공사 상임감사를 발탁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청와대 제도개혁비서관에 이신남 정부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중소벤처비서관에 이병현 중소기업연구원장, 농해수비서관에 정기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정책보좌관을 각각 내정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광주 최초! 뉴욕 감성의
첨단 비즈니스 지식산업센터**

**IT, 벤처, 스타트업, 1인 기업 등
기업사옥으로 지식산업센터 인기!**

허드슨 1041 **첨단2지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첨단 지식산업 플랫폼
광주 최초! 뉴욕 감성의 혁신 비즈니스 시대를 열다

- 분양금액의 최대 80%까지 장기저리융자 가능
- 취득세 50%, 재산세 37.5% 감면 등 세제혜택
- 최대 70억 한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 청년창업, 스타트업 등 창업 지원을 위한 창업지원센터 입주예정

KAIT 한국자산신탁 삼일건설 삼일루체아

모델하우스 오픈중

T.372-6666

모델하우스: 광주 서구 마곡동 165-14

[사업개요] ※ 위치: 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 1041번지 ※ 규모: 지하3층~지상15층 ※ 대지면적: 6,618.00㎡ ※ 용도: 지식산업센터(공정) 및 근린생활시설 기타지원시설 ※ 건축면적: 3,498.68㎡ ※ 연면적: 37,879.33㎡

지식산업센터 184실 | 근린생활시설 77실 | 지산·청고 21실 | 운동 및 문화집회시설 3개소

※ 본 홍보물의 내용은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홍보물에 표시된 확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홍보물에 사용된 사진, 일러스트, CG 등 이미지는 소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홍보물에 표시된 개략도(계획)는 사업주체, 국가(지자체) 및 기타 기관에서 발표된 내용을 참조한 것으로 관련 기관의 사정에 따라 사업주체 중 일부 변경, 지연,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세제(공제) 등 정부정책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허가 등에 따른 소위자 파생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 소위자의 용이한 관리보조를 위해 일괄계약(대우)을 사용합니다. ※ 역점사업인 미디어 서비스는 해당된 시설(마르코, 추후 사업 진행에 따라 입주 계약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